

한국 증시, 안전장치 마련

단상



박근혜

前 서울시장지주공단이장연합회 회장

한국 증시가 올해도 신흥 시장국 평가를 받으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MSCI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여의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 제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진국 지수 편입 대상국'으로 올리지 않았다. 앞서 발표된 MSCI 시장 접근성 리포트에서도 한국은 외환시장 자유화 등 5개 항목에서 제약을 받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MSCI는 우리 정부의 개혁 조치들은 인정하면서도 환시장 유동성 부족, 공매도 관련 규제 부담 등 핵심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6년 1분기 명목 GDP 증가율(잠정치)이 17.1%를 기록했다. 과히 호황(好況)이 아닐 수 없다. 실질 GDP 증가율도 3.8%를 보이면서 충분히 견실한 성장세로 해석할 만하다. 코스피(KOSPI) 지수도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지난 19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8% 오른 9288.89로 출발한 뒤 장중 역사상 최고점인 9300선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추자도 최대치를 매일 갱신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조용증'에 걸린 듯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Rollercoaster)'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Supercycle)'에 편승한 증시 초(超) 호황(好況)에 '빛부(빛내서 투자)'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연말(4214.17) 대비 100% 오르면서 '빛부'인 신용거래증자 잔고는 무려 38조원에 도달했다. 지난 23일엔 910.71포인트(9.99%) 곤두박질쳐 20분간 매매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생했다.

특정 종목 울림 현상도 심해졌다. 지난 26일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6885조3822억원으로 삼성전자가(1984조8110억원)와 SK하이닉스(1905조534억원) 비중(3889조8650억원)이 56.5%로 절반을 넘는다. 가폭이나 울림이 심한데 지난 5월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상장했다. 두 종목이 지난 29일 12%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ETF 상품 14개는 모두 20% 이상 하락했다. 주요 외신들이 한국 증

시보다 늦게 열린 미국 증시 하락 원인으로 '삼전닉스' ETF를 거론했을 정도다. 이리다 보니 당연히 코리가 물음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ETF 상품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국내 증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광풍(狂風)에 휩쓸리고 있는 한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상장

한달만에 시가총액 15조원을 넘어섰고, 누적 거래대금도 179조원에 달했다. 관련 ETF 거래량은 전체 ETF 시장의 25%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서학개미를 국내 시장으로 되돌려 증시 부양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 했지만, 외리 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22일 "드러누워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라고 토로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의 반영이다.

'삼전닉스 ETF' 도입 이후 증시는 투기 관 앙상을 보인다. 증시의 관순을 뿐 아니라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에 휩쓸린 청년층까지 레버리지 ETF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어제 94.81로 지난해 연말(28.85) 대비 3배 이상이다. 이 지수는 통상 50를 넘으면 극단적 공포 구간 진입으로 평가된다. '포모 심리'에 설상가상(雪上加霜) '빛부(빛내서 투자)'까지 가세해 뉴스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울림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접근성 제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관리 등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위험을 관리해야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서둘러 정교한 보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외리 레버리지 ETF 투자의 증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2년간에 불과한 시정 의무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 자산 규모를 토대로 투자금도 제한할 만하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특약제보 0213676-214 구독신청 022926-0217
 편집국 대표 0213676-214 FAX 021762-8223
 정치·행정부 021765-8115 경제·문화부 021926-0392
 사회·수도권부 022926-0314 편집부 022926-0242
 총무국 022926-0217 영업국 021926-0164 FAX 021762-8223
 광고문의 021926-0164 윤리팀 0329675-7956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09(도동동, 국동VRF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최저임금 인상 투쟁,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일까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이념적 균열로 몸살을 앓는다. 한쪽은 '최저임금이 민생'이라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는 주장이 충돌하면서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애초와 많이 달라진 현실이다.

실제 관련 기사에 담긴 '노력해서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고우면 기용이라도 배워라'라는 거친 대응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의 소득은 역량과 노력 등에 비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경제 상식이 대공심리에 자리 잡은 탓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담임원이 경제가 구동되는 시장 원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능력주의의 가면을 쓴 각자도생' 비판 논리로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하한선이 지켜져야 한다는 강변이 나온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 아니다. 고용주가 위험 부담을 안고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가격'이다. 최저임금이 복지적 성격이 아닌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속돈대가 낮고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시장이 부자연스럽게 퇴짜를 놓는 것도 결국 우리에겐 이익이 될까? 과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이 아닌 '단기 일자리의 증발'로 이어지는 현상 말이다. 매점마다 무인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이 아르바이트 생들을 대신했고, 고용주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세상사는 이야기
이영란 편집국장

'조끼가 알바'를 양산했다. 번지수 틀린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고용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해 버린 것이다.

최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양정수 민주노동 위원장은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양보를 강요한다"며 무조건 요정족의 중요와 저임금 노동자의 얕은 지갑을 대비시켰다.

'버릴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기업의 핑계로 치부하며 거래 자본의 약(弱)으로 돌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양 위원장은 '자영업 생태계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위원장이 지적한 '돈이 넘쳐나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주고 있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을 타격을 거의 없다.

반면 우선 당사 책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골목길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세력이다. 정작 해고 위기 앞에서 파업할 수 있다는 권리를 생각할 임무조차 내지 못하는 권익의 열악함이나 청소년 노동자들에 비하면 귀족의 지위를 누리려는 존재들이다.

자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탐욕과 무당이 다르지 않고 있다. 성격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고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지불 능력의 마지노선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국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직접 복지료 인건다툼을 삼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여줘 최저임금이나 시급을 올리는 것도 진정한 자영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논쟁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철학적 선택'이라는 거창한 수사로 포장하는 것 역시 경제학이 아니다.

또한 배려 구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잠재워 노동자의 시급을 올리는 임기유연이 아니다.

시장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이 논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양극화의 위기를 넘는 가장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의 철학이다.

이제는 교조적인 선의와 투쟁의 붉은 띠를 벗어던지고 경제학의 준엄한 원칙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기고



조은지 전 해안경찰서 읍지구대

장마철인 매년 6~7월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은 특성상 도로 주변 배수시설과 하

빗길 20% 감속 운전

천, 저지대가 많아 비가 오는 경우도 침수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보다 약 1.5~2배 증가하며 집중호우 시에는 최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장마철에는 빗길 미끄러짐, 중앙선 침범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야간 시인성과 침수도로 등 불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운전자는 빗길 운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김으로 인한 제동거리가 증가, 평소보다 속도를 20%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상 감속하여 운행해야 한다.

시속 100km 기준으로 마모된 타이어는 새 타이어보다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두 배 가까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량 출발 전 타이어 마모 상태와 와이퍼, 전조등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빗길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타이어는 100원짜리 동전처럼 타이어 홈에 끼워 이송신 강도가 절반 넘게 보이면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하며 만약 전기자의 경우엔 일반 차보다 무게와 초기 회전력이 높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철 대비해 경찰은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예방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다.

장마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배려로 안전사고 없는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 우수 브랜드 쌀'

4년 연속 수상

영호진미 합천쌀

